

종합토론

사 회 : 정은령(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
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

토론자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중배(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연구원)

지승우(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장)

토 론 내 용

○ 정은령(사회자)

1부 발제만큼이나 2부 토론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다 모셨나 할 정도입니다. 발제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인데, 10분밖에 시간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우영 교수님부터 토론해주십시오.

○ 이우영(토론자)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 경제·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김정은식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차원, 교육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친인민’의 기치 하에 인민들과 밀착하면서 문화적 융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 분야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예술과 언론의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김정은 시대에 들어 영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창작이 위축된 반면 2012년 창설된 ‘모란봉악단’ 중심의 음악정치는 강화되었습니다. 언론 부분에서는 노동신문의 변화에 대한 김영주 교수님의 글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방송 부분에 대한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진행자가 교체되고 영상구성이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4:3에서 16:9로 화면비율이 변했고, 오락프로그램에서도 ‘명승을 찾아서’, ‘사임당’ 등 남한식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시 내고향’ 같은 유형과 먹방 프로그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적 변화는 김정은의 리더십 메이킹 방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젊고 활동적인 지도 방식이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의 ‘공개성’ 지향은 정보유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데, 북한 인민이 외국문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생각 중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을 고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 변화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사회문화교류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계도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언론교류의 특성과 문제를 과거의 교류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류와 최근 교류 사이의 질적 변화나 콘텐츠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에서 대칭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당·국가체제가 정당한

북한 언론과 독립적인 시민사회를 전제하는 남한 언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대칭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칭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및 행위 기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의 기준과 남한의 기준이 다르며, 북한의 이익 여부가 남한의 이익 여부에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류문제에서는 윤리적 당위성이 현실적 실용성을 압도하는데, 이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통일 문제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먼 통일보다는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과도한 특수화도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특수한 국가를 갔을 때 상황에 따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적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보통 그 틀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특수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언론중재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 냉전구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언론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을 고려할 때 언론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언론 질서를 활용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담당 기자가 제일 좋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갈일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농담이 상징하는 의미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중재시스템을 논의하기 전에 남쪽에서 먼저 자체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오보집 발간 추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언론 상황을 이유로 남한 언론의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일종의 ‘중북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는 누군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남북 간 오보에서는 당사자가 북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북한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공동의 중재기구 발족을 논의해야합니다.

남북 간 언론중재 기구나 제도의 추진은 단계별로 남북관계 변화를 주시하면서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성 연락사무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발전적 시스템인 것은 맞는데 기존 교류 기조와는 다릅니다. 기존에는 민간에서 주로 교류했고 브로

커가 개입했는데, 개성 연락사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화되어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정부의 통제가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류단계에서 언론중재까지는 아니라도 남북언론교류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 정은령(사회자)

이우영 교수님께서 신석호 기자님에게 여러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교류와 현재 교류의 차이점, 비대칭성의 문제는 필요한지, 중재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스스로 먼저 오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왕선택 기자님입니다.

○ 왕선택(토론자)

북한 관련 오보는 그 자체로 언론과 언론인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대북 정책의 성공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해악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관련 오보를 방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인데, 왜 그런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 사회를 선도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생활을 25년 하면서 반성적으로 돌아해보니 우리 언론의 경우 사회를 선도하지 않고 사회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언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 변화 없이 언론계만의 반성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구조에서 북한 관련 오보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 진단에 따라 오보 방지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북한 관련 오보를 생산하는 사회 구조의 특성으로는 적대적 분단 구조, 한미 동맹, 진영 투쟁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적대적 분단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적개심 고취는 무죄라는 인식입니다. 적대적 분단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대 세력에 대해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보도는 설사 오보라고 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인은 물론 독자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오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이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대 세력을 미화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기 사항입니다. 국가 보안법에 의하면 위법 조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가 금지된 상태

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언론의 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보를 통제합니다. 북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정부는 유리한 정보는 유출하고 불리한 정보는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필요하면 정보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보 통제를 알기 어렵고, 안다고 해도 보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해설하는 것은 적대적 분단 구조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미 동맹과 사대주의 논란입니다. 한미동맹을 우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언론도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불량국가를 규탄하는 보도는 정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오보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중적 적대성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미동맹에서 보호국가 역할을 하는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적대국가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북한은 적대국가면서 동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경우 미국의 적대국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다음은 한국 언론이 진영투쟁의 포로가 되는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이념적 선명성 경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북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수든 진보든 정치인은 각각 자기 진영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선명성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한편, 전문가는 이론적 수월성 경쟁을 합니다. 학자 등 전문가 그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권 후보가 원하는 대북정책을 제공하면서 학문적 수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운색 또는 왜곡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담론은 더욱 편향성을 띠게 됩니다. 언론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언론인은 정치권으로부터 편향된 정보를 받거나 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운색된 해설을 받고 이것을 운문하는 과정에서 심한 왜곡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각종 정보와 주장 등은 정치인 단계, 전문가 단계, 언론인 단계에서 3단계로 운색, 왜곡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이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대적 분단 구조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여론 주도층 모두 기존 북한 관련 지식이 매우 편향됐다는 사실을 인

식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 구조가 다르다는 점 역시 교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을 진영 투쟁 소재로 활용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정치권, 언론계에 지속적으로 해당 논의를 상기시키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언론의 변화가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기본적으로 변해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은령(사회자)

지금까지 언론이 사회변화를 선도하지 않는다는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오보의 원인으로 사회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배 연구원님입니다.

○ 김중배(토론자)

왕선택 기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언론은 사회적인 구조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상당한 고민이 깔려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면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언론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남과 북이 오랜 역사에 쌓아온 불신과 적대적 체제의 대립,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은 지금의 보도 관행 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리선권-냉면발언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을 상대로 경협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라는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였고, 이에 극도로 반발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있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보도는 남북 간의 화해분위기를 해치는 가짜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별 언론사가 이러한 보도 분위기를 뒤집을 수는 없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최근 백두청송위원회라는, 특별히 그러한 명칭을 가진 단체가 김정은의 답방을 앞두고 서울 시내에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문이라는 명분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단체냐, 또는 그에 대한 생각이 주류적인 생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름만 부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한 비전향장기수 박종린 선

생님도 이런 보도는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가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대중이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두 발제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교수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측 언론은 정론성, 남측 언론은 보도성이라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두 언론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북쪽에 상주 평양특파원 지국을 개설하려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개설이 의미가 있는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석호 팀장님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경쟁적으로 각 언론사가 북측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이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언론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력이나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은령(사회자)

기자들에게 자구적 팩트에 대한 집중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승우 과장님이십니다.

○ 지승우(토론자)

북한 언론이 많이 변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남북교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활발하다가 이후 뜸해졌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로 북측과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북측이 남측 언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언론보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합니다. 남측과 북측은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지만 북측에서도 우리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로 인해 교류협력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기제들이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국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중국은 지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두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북측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국 운영 방안을 상세화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주제만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인지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구체화를 해도 취재활동 중 분명 제약이 따르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중재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서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북측에서의 활동의 제약을 인정해주고 언론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합의가 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지국들이 평양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들이 축적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국 문제를 구체화시켜야 논의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은령(사회자)

실무당국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우실 텐데, 지국 개설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남북 간 언론에 대한 상호 이해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발제자에 대한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발제자)

창원에서 테니스를 치다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석유가 매장되어있고, 희토류도 매장량이 세계 2위고 우라늄도 생산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 일간지 기자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논쟁이 발생해서, 제가 구글에서 외국 언론이 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희토류와 우라늄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되지만 석유는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직 기자들이 저보다는 정보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나 아니냐의 문제, 팩트에 대한 이야기, 벨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반 있다는 것은 팩트지만 반이나 있다는 것은 벨류입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팩트에 대해서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팩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보를 넘어 허보에 가깝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오보를 합니다. 오보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허보, 즉 가짜뉴스인데, 크로스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이 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료는 특히 크로스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북한 언론 공부를 30년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대표적으로 개성신문, 남포신문이 있는데, 모두 일

간지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명대백과를 참고해도 두 신문이 있는지 크로스체크가 안 됩니다. 짐작건대 2003년이나 2004년에 직할시에서 특급시로 바뀌면서 개성시가 황해북도로 편입되고, 남포시도 평안남도로 합쳐지면서 없어졌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크로스체크가 안 됩니다.

6자 회담을 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만 통신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연합뉴스가 기간통신사라 평양주재사무소를 논의하는데, 북한으로부터의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우리 언론사 별 성격, 논조 등 여러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석호(발제자)

지승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언론중재기능을 이미 통일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적어도 대화의 수혜를 언론도 받았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 측의 오보에 대해 해당 기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스스로 재판하고 선고하고 그랬습니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는 불만을 지 과장님을 통해 하니까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영 교수님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남북교류와 지금의 남북교류의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중단되고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끊어졌던 교류의 경험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교류하던 주요 인사들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쪽도 나름 시스템을 재건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언론의 대칭성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오가면서 기사를 쓰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상입니다. AP통신 평양지국으로 지국장으로 갔던 Jean Lee 씨를 포함하여 각국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원하는 말만 하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취재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자와 더 많은 공개를 위해 협상을 하는 동시에, 남측의 데스크와도 취재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언론인이면서 협상가라는 정체성을 다지는 언론인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당국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기자들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협업을 하면서 그들만의 그룹,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자주 바뀝니다. 정권이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의 사람들, 당국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북한보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야하는데, 오히려 정보를 가지고 자기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라져야 하고, 대신 전문성과 양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소통을 하고 그룹을 형성하여 민망한 짓을 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언론중재기구라는 제도보다도 언론계와, 북한을 전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킵니다. 북한전문기자라는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각 사의 전문기자들이 모여 공익적 일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이 이뤄집니다.

○ 정은령(사회자)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 분들 모두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코멘트 해주셔도 좋고 질문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인태(성균관대학교 학생)

왕선택 기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토론을 듣고 해외에 상주하는 특파원들의 보도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특파원들이 특정 언론의 여론을 미국 전역의 여론이라고 보도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인식하도록 교육해야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사대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왕선택(토론자)

우리나라에는 보수적 입장을 따르는 언론과 진보적 입장을 따르는 언론이 있고, 각사에서 미국에 특파원을 보냅니다. 우리 언론은 자유주의 언론으로서 나름대로 진보적,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언론의 자정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회사의 도움으로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분야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 때도 지금과 같이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YTN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년째 전문기자를 하고 있지만 전문기자가 오보방지의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기자는 언론 내 해결책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으나 사회전체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전문기자가 적대적 분단관계의 포로가 된다면,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진영의 포로가 된다면, 보수나 진보 진영의 투사가 된다면, 전문기자는 오히려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보도준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항은 진보진영, 어떤 조항은 보수진영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준칙이 아닙니다. 보도준칙이 없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최은아(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

대북보도의 특수성에 기대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에 공감합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언론의 보도문제와 관련해 자정능력을 보여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난 피해자를 보도할 때 제기되는 인권문제나 언론소비자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차별적 표현을 지양하는 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보도의 오보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내부의 문제의식이 있을 것이고 토론도 했을 텐데, 보도준칙 형태가 아니라면 언론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신석호(발제자)

분단 저널리즘 뛰어넘기라는 책은 이런 고민에서 썼습니다. 사회가 기자들을 감시하면서 못하면 질책하고 잘하면 환호하는데, 이런 현상은 기자들의 전문성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전문성을 버릴 때,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그런 감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자들은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 핵심은 회의주의에 있습니다. 모든 정보에 대해 의심하고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전문가적 회의주의를 가진 언론인 집단, 양식을 가진 전문가들, 양질의 당국자들이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있다면, 그들이 그룹을 이루고 자율규제를 통해 오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왕선택(토론자)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정노력을 하느냐고 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면과 화면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신입기자는 데스크에게, 부장은 국장에게 질책을 받고 국장은 시청률이나 판매부수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보도가 관심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은 사회를 선도하지 않고, 사회를 반영합니다. 내 보도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가하는 문제가 광고와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나기자협회와 같이 언론감시 전문매체에서 하는 비평을 통해 자극받는 것이 유일한 자정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 오보 문제의 주체는 북한인데, 북한에서 오보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오보가 나도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오보를 냅니다. 이런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도준칙도 답이 아니고 결국 교육이 답입니다. 우리사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인들이 선명성 경쟁, 전문가 이론의 윤색, 이후 언론인들의 영향력 있는 유포와 같은 오보의 유통구조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전문가, 언론인, 북한문제 당사자를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보대응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취재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취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 뒤 오보가 나면 비난이 가능한데, 자율적 취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보에 대한 비난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수준 높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으로 교육을 들 수 있으며, 교육주체로는 통일교육원,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으면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 김중배(토론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사회에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자들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연합뉴스의 통신기자들도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너무 바쁘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보의 가능성, 북한을 취재할 수 없는 정보접근의 제약성, 한계 등을 절감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내보내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 언론들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은령(사회자)

토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주제가 남북 간 오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었지만 그 오보가 생산될 수 있는 큰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남북 간 언론교류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밀도 있는 논의가 되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석형 위원장님께서 토론회 정리발언 해주시겠습니다.

○ 이석형 위원장

매우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해주신 일곱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발표를 해주신 김영주 교수님, 신석호 박사님, 토론주자로 나서주신 이우영 교수님, 왕선택 전문기자님, 김중배 연구원님, 지승우 사회문화교류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곱 분들의 성과 이름을 보니 전체 스물한자인데, 김씨 분이 두 분이고, 영과 우자 이름자가 겹친 것 외에는 다 다르십니다. 자유토론에 정말 걸맞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을 경청하면서 첫 번째는 남북한의 언론의 격차가 이토록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했는데, 과연 북에서는 이런 토론회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봤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격차가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간 언론교류의 필요성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북 간 오보의 극복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당위적으로 남북 간 언론문화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협업하는 것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남북 민족에 대해서 시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문병란 교수님의 ‘직녀에게’라는 긴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발췌를 해서 낭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돛돌이 없어도

가슴을 던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뎛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은령(사회자)

이석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